

코리아타임스 특별기고 -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 -

지금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공동번영을 향한 적극적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한반도 안보환경은 평화를 말하기에는 너무도 엄중하고 긴박하였다. 제2차 북핵 위기로 인해 북·미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한반도 주변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감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와 같이 불안한 여건에서 출발한 참여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분명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견지해 왔다. 안보를 위해 끊임없이 상대를 경계하고 적대해서 대결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절제하면서 남북 간의 신뢰를 쌓아 왔다. 나아가 남북관계라는 좁은 틀이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질서 전체를 내다보면서 균형외교를 추진해 왔다.

북핵문제는 그동안 북한 핵실험과 BDA 문제 등으로 많은 고비를 겪었지만, 6자 회담 당사국 간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온 결과, 이제 본격적

인 해결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2005년 9·19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와 10·3합의 등을 통해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였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약속들은 성실하게 지켜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7월 핵시설을 폐쇄하였다. 그리고 연내 불능화를 목표로 전문가들이 방북하여 관련 시설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 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한 것은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이래 15년 만의 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간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도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평화체제 논의도 개시하기로 하였다.

평화체제 문제는 이미 2005년 9·19공동성명을 통해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이에 관한 협상을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나와 미국, 중국 지도자들은 각기 정상회담의 기회를 통해 평화체제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와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정부의 평화협정 체결 의사에 대해 환영하면서 관련 당사국 정상들이 한반도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키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반도에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직접 관련 당사국 정상선언은 정치적·상징적 의미가 클 뿐 아니라 비핵화 일정을 촉진시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질서가 확고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에 남아 있는 대결구도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상호존중과 공존의 질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참여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3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추진해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나는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 이후에도 동북아시아의 평화안보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로 계속 발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이르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그동안 쌓아 온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역지사지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우리 한반도가 세계 평화와 번영의 진원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